
20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

- 혁신과 민생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 추진 -

2018. 2. 27.

순서

1. '17년 규제혁신 성과 및 평가	1
2. '18년 규제혁신 방향 및 계획	2
① 미래新산업 규제혁신		
②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		
③ 국민불편·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		
④ 규제관리 시스템 및 행태 개선		
3. '18년 규제혁신 중점 추진 과제	4
(부처 제출 과제 중심)		
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각 부처는 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국조실에 제출(1월) → 이를 종합하여 '18년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(2월)
- * '18년 규제 정비지침 부처 통보('17.12.26)

1. '17년 규제혁신 성과 및 평가

① 새 정부 규제혁신 재설계

-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'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재설계' 포함
- 이를 바탕으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방향(3대 영역)* 확정('17.9.7)
 - ① '미래 新산업' ② '일자리 창출' ③ '민생불편과 부담' 분야 규제 혁신
 -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

② 혁신과 민생을 위한 규제혁신 주요성과

- ① 신산업은 '우선허용-사후규제'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,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한 규제혁신 본격 추진
 -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1+4개 입법* 검토·추진
 - * 행정규제기본법 개정(규제특례 원칙), 분야별(ICT융합·핀테크·산업융합·지역특구)
 - 포괄적 네거티브 입법방식 전환과제 38건 발굴·효과 추진
 - 주요 혁신성장 선도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 검토·추진 착수
 -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로 인한 애로를 발굴하여 91건중 89건 해소
- ② 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규제의 효과 및 국민 불편 해소, 중소기업·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혁신 추진
 - * △ 최초 행정조사 전수점검('17.5~8월)으로 국민부담이 큰 행정조사 정비(175건)
 - △ 낙후지역 재생 등 지역발전 효과가 큰 분야 중심 규제정비(47건)
 - △ 국민생활 밀접 분야 중심 경쟁제한적 규제혁신(25건) 등
- ③ 현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한 맞춤형 규제혁신
 - 국무총리 주재 '규제효과를 위한 현장대화'(2회) 추진, 현장 방문 및 간담회(46회)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 과제 발굴 및 효과
 -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규제애로 해소
 - * 새 정부 출범 이후 1,159건 규제건의 접수·처리
- ④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·제도 정비
 - △중소기업 등 규제차등화, △생명·안전·환경 규제 폐지·완화시 규제심사 → 「행정규제기본법」 개정안 국회제출('17.12)

2. '18년 규제혁신 추진 방향 및 계획

- ◇ 기존과는 달리 **포괄적 네거티브규제로의 전환에 중점**(법.제도적 접근) + 각 부처별 **과제 발굴.혁파 병행(사례별 접근)**
- ◇ 감사부담 완화 등 **적극행정 지원방안 확산**으로 **현장 실행력 제고**
- ⇒ 금년 규제혁파 성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**속도감 있게 강력 추진**

1 미래新산업 규제혁신

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법·제도 정비 및 확산

- **(신산업 규제특례 법령정비)**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담은 **행정규제기본법*** 입법 마무리(상반기)
 - * △우선허용·사후규제 원칙 △규제신속확인 의무 △규제법령정비 의무 등
- **중앙부처(법령) → 공공기관(규정·지침)까지 규제특례 적용·확산**
 - * '17년 적용 사례 등을 포함하여 '네거티브 규제 발굴 가이드라인' 보완·배포(2월)
- 신산업 사업자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법령상 규제존재 여부 또는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해 주는 **규제신속확인제**를 도입(금년중)
- **신설·강화 규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기능 강화**
 - * 신설·강화 규제의 신산업 영향분석 매뉴얼 마련 및 추진(3월)
- **(규제 샌드박스 제도정착)** 4대 분야별 '**규제 샌드박스 관련법***' 입법 마무리(상반기) 및 추가 입법과제 발굴 추진(연중)
 - * ICT융합법, 금융혁신지원법(제정), 산업융합촉진법, 지역특구법 개정
- 시범사업을 폭넓게 발굴 추진, 가급적 **상반기**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

② 신산업 선도사업 규제혁신

- **(선제적 발굴 혁신)** **혁신성장 선도사업(8대 선도)***의 **핵심규제를 발굴·혁파**하고, 타 분야·사업으로 **확산(국조실 총괄·점검**)**
 - * △초연결지능화 △핀테크 △에너지신산업 △스마트시티 △드론 △자율주행차 등
 - ** 1차 혁파과제(1월 규제혁신토론회 보고) 이행상황 주기적 점검 및 추가과제 지속 발굴
- 신산업 선도사업의 향후 **발전양상을 예측**하여 규제이슈를 폭넓게 발굴, 단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**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** 구축
 - * **자율주행차 분야(상반기) → 드론, 맞춤형 헬스케어 등 타분야 확산**
- **(현장 제기 규제혁신)** 신산업 관련업계에서 규제로 인해 겪는 **현장 애로**를 발굴, **맞춤형***으로 해소(상·하반기)
 - *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(민간전문가 120명)를 중심으로 건의자·부처와 함께 심층 토의

2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

1 현장 중심 일자리 규제혁신 추진

- **(일자리 창출)** 관계부처간 협업하여 **일자리 창출과 직결되는 프로젝트** 발굴, 규제개혁 지원(상·하반기)
 - 정부내 전담창구를 지정, 중소·중견기업의 소규모 프로젝트 우선 해결
 - 중소벤처·지자체 등 건의사항 상시 접수 및 기업 현장방문 등 추진
- **(규제혁신 체계 구축)** 「**일자리 규제혁신 TF**(정부)」를 구성하고 ‘규제혁신 민관협의회(경제단체 등)’와 ‘시·도협의회(지자체)’ 등 **협력체계 운영(2월~)**
 - * 국무조정실, 기재·산업·중기부 등 관계부처 참여, 일자리위원회와 긴밀 협조

2 주요 분야별 일자리 산업 육성

- **(서비스산업 규제혁신)** △공유경제 등 **신유형** △콘텐츠·연구개발 등 **지식집약형** △음식·숙박 등 **생활밀착형** 서비스 분야 대책 수립(상·하반기)
- **(경쟁제한적 규제혁신)** △혁신시장 신규진입 제한 △서비스업 영업 활동·방식 제한 분야 등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 발표(상·하반기)

3 국민불편·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

1 민생불편 해소 및 지역분권 제고 규제혁신

- **(국민생활 불편 규제혁신)** 국민불편 분야별 **덩어리 규제 점검·정비**
 - △주민·이용객 불편 영업규제(3월) △온라인 거래·활용 저해규제(6월) △개인·국공유지 활용 저해규제(9월) △관광·숙박 불편규제(12월) 혁신방안 발표
- **(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)** **지방규제 정비 및 지방분권 관련 규제혁파**
 - △지역 일자리 및 신산업 분야 중심 지역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(상·하반기)
 - △자치권 확대를 위한 중앙법령 정비방안(4월) △지자체 건의(3년간 1만여건) 분석 등을 통한 규제권한 지방 이양계획 수립(하반기)

2 중소기업·소상공인 부담 완화

- **(규제 차등화)** 중소기업·소상공인을 위한 **규제 차등화 검토 의무화**
 - * 규제영향분석(부처)→중기영향평가(중기부)→규제심사(규개위)
 - ** 시범사업 및 매뉴얼 마련(~7월)→규제 차등화 전면 실시(하반기)
- **(중소기업·소상공인 부담 경감)** 영업규제, 부담금·수수료, 인증 관련 시험·검사제도 등의 **부담경감 규제혁신 방안 마련(상·하반기)**

4 규제관리 시스템 및 행태 개선

1 합리적인 규제심사 품질 제고

- **(생명·안전·환경 규제 관리 강화)** 생명·안전·환경 분야의 꼭 필요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도록 폐지·완화 시에도 규제의 필요성·적정성 심사
* 매뉴얼 정비 및 부처 교육(~5월) → 규제심사 전면 실시(하반기)
- **(사회적 비용·편익 분석 강화)** 직접비용·편익 외, 기업·국민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종합 고려토록 사회적 비용·편익 분석 강화
* 가이드라인 마련(3월) → 부처 교육 및 심사 적용(4월~)

2 적극행정 지원방안 확산

- **(감사제도·운영 개선 추진)**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△전담조직 및 자문委 설치 △감사 자제대상* 선정 △(가칭)「감사운영협의회」 구성 추진(감사원)
* 무인이동체·ICT융합 등 5개 분야(세부 13개) 선정('18.2.20)
- **(규제혁신 지원방안 마련·추진)** △적극적 규제혁신 유도를 위한 자체감사 제도 운영 △인센티브 강화 및 조직혁신 방안 강구(각 부처)

3. '18년 규제혁신 중점 추진 과제 (부처 제출 과제 중심)

◇ '18년 규제정비지침 시달('17.12.26) → 36개 부처 490개 과제 제출('18.1월)
⇒ 국조실 검토·조정*을 거쳐 **35개 부처 400개 과제 선정**('18.2월)

* 부처 제출과제중 비규제 사항 제외, 신산업 과제 추가 등 90여건 보완·조정

⇒ 발굴된 **400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파와 함께 연중 추가적인 과제 발굴/개혁** 추진

1 400개 규제혁신 세부과제 적극 추진(30대 핵심과제, 400개 세부과제)

- 400개 과제 중 **333개를 핵심과제로 분류·추진**하고, 나머지 67개 과제는 기타 부처과제로 추진
* △미래新산업 △일자리 창출 △민생불편·부담 분야 규제혁신
- 각 과제는 **조기 성과 창출을 위해 완료시한을 최대한 단축**
* 상반기내 하위법령(76%) 입법완료, 법률 제·개정(24%) 국회제출(연내 입법완료) 추진
※ **붙임 : 30대 핵심과제 및 기타 부처과제**

2 규제혁신 대상과제 점검 관리(각 부처 책임관리 → 국조실 점검·평가)

- 각 부처 책임하에 조기 이행 추진 → 국조실에서 **수시·분기별 점검**
- 국민체감이 되도록 주요성과 끝까지 관리, **연말 규제혁신 평가 반영**
- 400개 외에 연중 세부과제 추가 발굴 지속 및 이행점검 추진

□ **30대 핵심과제** : 333개 세부과제

분 야	핵심과제
<p>미래新산업 규제혁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② 규제 샌드박스 도입 ③ 규제 신속확인제 도입 ④ 신산업 R&D 및 인력관리 효율화 ⑤ 초연결 지능화 혁신 ⑥ 핀테크 활성화 혁신 ⑦ 에너지 신산업 혁신 ⑧ 무인이동체 혁신 ⑨ 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 ⑩ 기타 분야별 신산업 선도사업 규제혁신
<p>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혁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창업 저해 규제 혁신 ② 벤처기업 등 투자활성화 지원 ③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합리화 ④ 공공부문 수행업무 민간 참여 확대 ⑤ 공공조달 및 계약 요건·절차 혁신 ⑥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 ⑦ 물류산업 진입·해외진출 규제 완화 ⑧ 레저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⑨ 업종별 진입규제 완화 ⑩ 불합리한 자격 요건·제한 혁신
<p>국민불편 민생부담 야기 규제혁신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주민 불편 입지규제 혁신 ② 취약계층·사회적약자 불편·부담 해소 ③ 출입국·수출입 절차 간소화 ④ 온라인 행정업무 확산 ⑤ 민원 서식·절차 등 간소화 ⑥ 국민 주거·생활 불편 해소 ⑦ 불합리한 영업규제 완화 ⑧ 중소기업 부담 경감 및 차등규제 확대 ⑨ 인증·시험·검사제도 합리화 ⑩ 부담금·수수료 제도혁신

□ **기타 부처과제** : 67개 세부과제

- 30대 핵심과제 외에 각 부처 고유업무 중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사항 등 67건 개선 추진